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 **Webinar**

**AIPS-JFIR 한·일 국제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관계”**

### **일시**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10:00-12:00

### **주최**

아산정책연구원, 일본국제포럼

## 참석자

---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와타나베 마유, 일본국제포럼 이사장

가와시마 신, 동경대학 교수

이이다 마사후미, 방위연구소 지역연구부 미구러시아연구실장

사타케 토모히코,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

오바 미에, 가나가와대 교수

이토 아세이, 동경대 준교수

## 프로그램

개회 (10:00-10:10)	(日) 와타나베 마유 (JFIR 이사장) (韓)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세션 1 (10:10-11:00)	<b>미중 관계와 동아시아지역정세 (북한 포함)</b>
사회	(日) 가와시마 신 (동경대)
발표	(日) 이이다 마사후미 (방위연구소) <i>"U.S.-China Competition in the South China Sea"</i> (韓)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i>"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post-COVID-19 Era: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Issue"</i> (日) 사타케 토모히코 (방위연구소) <i>"The Future of QUAD"</i> (韓)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i>"The Return of the Impossible State: The End of Denuclearization Diplomacy"</i>
전체토론	전원
세션 2 (11:00-11:50)	<b>동아시아지역협력과 한일관계 (FOIP, RCEP, 한중일 등)</b>
사회	(韓)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p>발표</p>	<p>(韓)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i>"Troubles of Northeast Asian cooperation and the Experience of ASEAN"</i></p> <p>(日) 오바 미에 (가나가와대)  <i>"The Potential of Japan-Korea Cooperation in Asian Multilateral Fora"</i></p> <p>(韓)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i>"Rethinking Strategic Importance of Korea-Japan Cooperation to Strengthen Regional Democracy Order"</i></p> <p>(日) 이토 아세이(동경대)  <i>"Japan's Economic Pragmatism: Cooperating and Competing with China"</i></p>
<p>전체토론</p>	<p>전원</p>
<p>폐회 (11:50-12:00)</p>	<p>(韓)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p> <p>(日) 가와시마 신 (동경대)</p>

## 개회

---

키쿠치 요나 (전체사회):

아산정책연구원과 일본국제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관계'를 시작하겠다. 개회인사로 양측 대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먼저 일본국제포럼을 대표해서 와타나베 마유 이사장님의 말씀이 있겠다.

와타나베 마유 (일본국제포럼 이사장):

일본국제포럼의 이사장 와타나베 마유입니다. 오늘 한승주 이사장님을 비롯한 한국 측, 일본 측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관계'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COVID-19 로 인해 양국 교류가 원만하지 않아 화상 회의로 진행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저희 일본국제포럼은 민간 비영리기관으로 초당파적 입장에서 국제 교류에 대해 연구하는 싱크탱크다. 방어적인 글로벌리즘 시대, 일본과 세계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 등에 의한 비글로벌리즘은 기존부터 있었던 기후변화, 감염증 등의 글로벌 이슈를 포함해 전 세계를 바닥부터 변화시키며 기존의 글로벌리즘이라는 국제 질서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세계는 COVID-19 감염 확대 이후, 미중 대립이 보다 더 첨예해지고 있다. 무역, 디지털 분야, 가치관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긴장 상황은 일본,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도 불투명성을 가져다준다. 코로나 감염 확대는 여전히 의료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경제 분야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일본을 포함한 국제 사회는 이 미지의 감염증에 대한 시행착오를 매일 겪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 양국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고 일컬어 지고 있다. 관계가 냉각된 상태이긴 하지만, 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며 한중일 FTA, RCEP 등 공동의 연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접근법은 다르지만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심도 크다. 건전한 한일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양국이 책임 있는 국가로서 함께 해 나가길 바란다.

키쿠치 요나 (전체사회):

다음으로 아산정책연구원의 한승주 이사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승주(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저는 서울에 있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이사장 직을 맡고 있는 한승주입니다. 와타나베 마유 이사장님과 일본, 한국의 전문가, 대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COVID-19 이후 시대의 한일관계/일한관계라는 제목으로 일본국제포럼과 아산정책연구원이 최초로 영상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이러한 회의는 상당히 중요한 의의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시점에 일본과 한국 양국은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몇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COVID-19라는 전 세계적으로 사상 초유의 팬데믹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구가 조밀한 양국에 계속적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공격하고 있다. 더불어 전 지구적으로 기후 온난화 현상이 엄습하고 있다. 둘째는, 우리 주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역사적인 경쟁과 갈등관계를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과 한국 양국의 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셋째는, 역사적으로 갈등관계로 점철되던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와 밀접한 동맹국인 미국과 경쟁하기 위하여 앙탕트(entente)를 맺고 군사적, 경제적 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이러한 국제환경을 활용해서 북한이 일본과 한국 두 나라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 미사일을 개발하고 수적, 질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는 다자적 협력에서 각자도생의 투쟁적 관계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첫째, 노골적인 힘의 정치(power politics)를 노정하고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인내를 갖고 어둠에서 칼을 갈아라)'는 유헌에서 벗어나 '유소작위(필요할 때 행동을 취한다)'는 시진핑의 생각대로 근육 과시(muscle flexing)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둘째, 세계 각국 특히 강대국은 세계주의(globalism)에서 민족주의 내지는 진영주의(tribalism),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즉 소속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에서 다행히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은 최근 협력을 강조하는 정치적 분위기가 우세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의 부족주의가 바이든의 국제주의로 옮겨가는 것이 그 조짐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무작정적 반일 감정과 활동에 대한 반성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OVID-19

이후 시대의 한일관계를 논의, 협력을 구상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좋은 회의가 되길 기대한다.

## 세션 1. 미중 관계와 동아시아 지역정세

사회	(日) 가와시마 신 (동경대)
발표	(日) 이이다 마사후미 (방위연구소) (韓)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日) 사타케 토모히코 (방위연구소) (韓)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가와시마 신 (사회):

세션 1에 4명의 발표자가 있는데, 각각 7분씩 발표하고 남은 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 세션 1의 주제는 미중관계에서 본 동아시아 정세다. 현재 미중 대립·갈등을 감안해서 안보,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특히 안보와 경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덧붙여 미국은 일본,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미국과 같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하는 부분도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첨단산업 등에서는 중국 내수를 중시하면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가입하고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가입할 뜻을 표명하는 등 '세계는 중국의 시장을 우선한다'는 상황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미중 대립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과 단순히 대립할 수 없고, 외교안보 문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는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태평양 각국도 마찬가지다. 군사 안보 관해서도 중국은 '해경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 주변 국가들의 우려의 목소리 나오는데 이에 대해 논의 부탁드린다. 첫 번째로 이이다 마사후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다.

### 발표1. "U.S.-China Competition in the South China Sea"

이이다 마사후미 (방위연구소 미구러시아연구실장):

저는 오늘 미중 관계에 대해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관계의 현 상황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중 관계가 동남아시아 특히 남중국해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전제하고 있는가이다.

먼저 미중 관계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지난 해 COVID-19로 인해 종래의 악화되어 있던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이 코로나를 일으킨 원인으로 중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비민주주의적 정치 체제야말로 이 코로나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하나의 기회로 삼아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미국과 서방의 비판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정권의 코로나에 대한 정책 실패를 중국에 전가했다고 반론할 뿐만 아니라 COVID-19를 둘러싸고 중국을 비판하는 국가, 예를 들어 호주, 대만, 체코에 대해 거세게 반격하고 있다. 미중 양국이, 서로를 신랄하게 비판, 공격하는 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미중 관계를 신냉전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미중 양국 모두 핵대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열전(hot war)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가치관, 이데올로기 혹은 체제면에서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점에서 새로운 냉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미중 간 국력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경쟁을 계속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이 있기 때문에 미중 양국 중 어느 나라도 이 경쟁에서 손을 떼지 않는 한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이것 또한 냉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바이든 정권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파트너십, 진영을 확대하고 있다. 조금 전 한승주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러시아,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진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진영 대 진영의 경쟁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새로운 냉전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냉전과 다른 점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아져서 미중 간의 경쟁 영역이 보다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미중 관계가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하겠다. 두 가지 큰 경쟁이 동남아에서 전개될 것이라 생각한다. 첫 번째는, 군사적 경쟁인데 특히 남중국해에서 이러한 경쟁이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알다시피 중국은 미국과의 신냉전을 경계하면서 미군에 대해서 A2/AD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능력을 강화하는 데 남중국해에서 군사력(military presence)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공섬을 만들어 기지화하거나, 군사훈련을 강화하거나, 미군의 행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에 반격(push back)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항모 타격전단과 전략 폭격기 파견 및 미사일을 포함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 한가지 경쟁은 동남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이다. 미국은 이 지역의 동맹국인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으로 중국은 우방국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 대해 정치, 경제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 중국 중심의 지역 질서에 대항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전략이 경합을 벌일 것이다.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명확하다.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한국이 미중 대립 상황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상이다.

가와시마 신 (사회):

동남아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진영 형성 방법과 가능성은 동남아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거나 양자 사이에서 밸런스 취할 것인가를 통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께서 발표하겠다.

## **발표2.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post-COVID-19 Era: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Issue"**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좋은 내용 감사하다. 이이다 선생님께서 미중 대립에 대해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그에 동의한다. 왜 전쟁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전쟁이 경쟁의 극단적 형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쟁할 때 상대방이 제거되거나, 완전히 체제가 변해, 나와 같아지는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런데 미중이 하고 있는 경쟁 양식을 보면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나에 대한 위협이라고 본다. 당장 전쟁을 해서 무너뜨리지 않더라도 상대 체제가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포위, 봉쇄하고 궁극적으로 그 체제가 붕괴되거나 변환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신냉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냉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발표할 내용이 미중 간 전략경쟁이 동북아의 불안요소인 북한에게 어떤 영향 미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상당한 함축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포스트 COVID-

19 시대에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된다는 것이 북한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회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앞으로도 중국이 북한을 방기·포기(abandonment)할 가능성 더 줄어든다. 왜냐하면 당장 중국의 입장에서 신냉전 양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군사적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오는 것을 단기간 내에는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누군가 계속 미국을 피곤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북한만큼 그러한 전략적인 가치를 지닌 나라가 없다.

신냉전에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북중 간 정치적 유사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시진핑 이전만 해도 전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하나의 변형이었다. 그 기본적 궤적을 버리지 않았는데 시진핑 시대 들어오면서 개인의 장기집권, 개인 우상화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는 익숙한 현상인데 두 체제가 체제 유사성을 지님으로써 서로 의지하고 신냉전 속에서 살아남을 공동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미국 역시 이러한 신냉전의 상황 속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북한을 그냥 변방에 존재하고 있는 골치 아픈 존재 정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잘 끌어들이면, 다시 말해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립화 시키거나 아니면 미국 쪽에 친하게 끌어들이 수 있다면 중국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구상을 실현해 옮겼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중이 전략적인 경쟁관계가 되니, 미중 간 빅딜, 즉 아주 큰 거래나 타협이 이루어져 두 국가가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안심요인이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전요인도 굉장히 만만치 않다.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보자면, 북한이 지금 빨리 미북 간 직접적인 양자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재 너무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당장 북한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더욱이 국내적인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북한과 타협할 동기가 굉장히 약하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를 강조하고,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방법론으로는 단계적 조건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내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 결국 근본적으로는 북한과 관련된 것이 '안보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에 대한 혐오'가 문제가 된다. 중국이 지금 닳아가고

있는, 문제 있는 체제의 원천이 평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핵화뿐만 아니라 이 체제 자체와 타협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도, 북한을 현 상황에서 생존하는 것 이상으로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북한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이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60주년으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도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김정은이 밝힌 바 있다. 최근 김여정이나 최선희 담화에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떼놓고 메시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절대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나올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북한의 행태는 앞으로도 더욱 예측 불가하고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 금년의 경우, 특히 하반기에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재개와 같은 상황도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러한 틈새 내에서 한반도에서의 크고 작은 도발들도 서서히 재현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3월에 북한의 크루즈 미사일 발사와 두 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국과 일본에 주는 일종의 무력 시위 효과는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낙하 지점으로 보면 이 두 미사일은 사거리의 조정에 따라서 한반도와 일본을 모두 겨냥할 수 있는 위협으로 될 수 있고, 아마 당분간 북한은 결정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모라토리엄(moratorium)의 붕괴, 다시 말해 핵실험 재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동은 좀 유보하는 대신, 한국과 일본을 계속적으로 자극하고 나와 간접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태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지금 우리 한일 간은 너무 갈등에 매진해 있다. 이것이 안 풀리면 한발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양국 정부의 입장이다. 갈등 현안은 현안대로 관리하면서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입장에서 아직도 완전하게 연장 의사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같은 것도 금년에는 연장 방향 자체가 명확하게 양측이 동시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협력이 가시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와시마 신 (사회):

일북 측 패널리스트에게도 자극적인 발언이었다고 본다. 쿼드(QUAD) 또는 FOIP도 미중 대립관계와 관련이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논의가 심화되기를 기대한다.

### 발표3. “The Future of QUAD”

사타케 토모히코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

항상 논의를 드리면서 흥미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쿼드(Quad)에 대해서 화두에 올리고 있지만 쿼드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직 컨센서스(consensu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쿼드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4개국 간 정책 조정을 위한 느슨한 형태의 틀’이라는 주장과 ‘보다 더 제도화되고, 확고한 집단 행동을 위한 틀’이라는 것이 있다고 본다. 일본과 미국, 호주에 있어 ‘미·일·호 3자 전략대화(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TSD)’라고 하는 보다 더 제도적인 틀이 있지만 과연 쿼드가 이와 동일한 형태가 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정의가 나와 있다.

최근 일본정부의 행동을 보면 쿼드를 TSD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제도화하려는 의향이 있어 보이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생각한다. 쿼드가 아베 전 총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쿼드는 2004년 인도양의 쓰나미를 계기로 일·미·호 3개국이 연대를 취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3국 정부가 이를 상당히 높이 평가해 좋은 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베 총리가 이를 전략으로 발표하였다. 그 이후 쿼드에 대한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기원이다. 그 과정에서 호주가 일방적으로 움직여 일단 쿼드가 좌절되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케빈 러드(Kevin Rudd) 총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호주가 2008년 탈퇴할 때, 당시 아베 총리로부터 후쿠다 총리로 정권이 바뀌었다. 후쿠다 총리는 쿼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인도 역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에는 쿼드를 진행하는 데 있어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쿼드가 좌절된 직후부터 중국의 강경한 자세가 두드러졌다. 중국이 해양 진출을 활발하게 하게 되었고 2010년에는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일본의 해경 순시선과 중국의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 중국의 이른바 economic coercion(경제적 압박), 무역 등의 수단을 통해 자국의 존재감을 보다 강화하고, 일대일로가 나온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해 일본, 미국, 인도, 호주의 관계가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각국 간의 관계가 강화된 가운데 쿼드의 기운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것이 Quad 2.0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2017년 고노 외무상이 쿼드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었고, 2021년 3월 쿼드 국가들간 정상회의가 이뤄지게 되었다.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조만간 방위상 회의가 열릴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한다. 기시 일본 방위상이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쿼드가 어떤 식으로 나갈지 말씀드리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도화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TSD의 경우, 쿼드와 마찬가지로 정부 각료급 회의에서 시작되어 그 다음 장관회의, 정상회의가 이뤄지게 된다. 그리고 정상회의 개최와 동시에 워킹그룹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화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약간 회의적이다. 물론 TSD와 마찬가지로 쿼드도 중국에 대한 우려,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관여도 증가라는 점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TSD가 결국은 미국의 동맹국이 모인 체제이다. 그렇지만 인도는 아니다.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관여와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이 3국 간 협력을 진행해 왔지만, 인도의 경우는 이와 같은 생각이 없다. 인도는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보다 더 자율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도 TSD는 선진국가들 간의 관계이지만 인도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극적이다. RCEP도 마찬가지이다. TSD와 마찬가지로 쿼드 역시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정상회의에서도 코로나, 기후변화와 같은 대책에 대한 협력을 해 나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워킹그룹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와 같은 협력이 TSD와 마찬가지로 미사일방위, 해양안보와 같은 방식으로 발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TSD안에서도 갭(gap)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센카쿠 열도를 어떤 식으로 수호를 할 것이냐가 방위성의 최대 과제이면서도,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부분도 있다. 호주의 경우는, 중국이 위협이긴 하지만 위협의 성질이 일본과 같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호주는 지리적으로 남중국해, 남태평양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힘의 요새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한편, 인도의 경우, 전통적으로 미국이 이 지역에서 힘을 키우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일본, 호주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쿼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집단행동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이 지역 내에서 역할을 분담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 호주, 인도가 각 구역별로 담당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커버하는 식의 협력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쿼드뿐만 아니라 이 지역 내 'Hub and Spokes'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 체제 그리고 동맹국 간의 협력이 있다. 일본, 인도, 호주의 협력체제, 혹은 한국, 일본, 미국의 협력,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협력 역시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지역 내 여러 복수국가 간의 협력 체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호주와 협력하고 있고, 인도와의 관계도 최근에 많이 진전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협력 취지를 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하다.

가와시마 신(사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Hub and Spokes'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형태의 안보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쿼드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서 새로운 형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지역 내의 안전 보장의 형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발표 4. “The Return of the Impossible State: The End of Denuclearization Diplomacy”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 발표에서는 북한 내부의 내재적 관점에서 향후 북한이 어떻게 외교를 진행할 것인지, 특히 비핵화 외교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일단 북한이 현재 처해있는 현실을 보면 상당히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북한의 경제가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이다. 북한 대외무역의 거의 9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대중 수입이 하루 아침에 90% 가량 증발한 사례가 있다. 북한 내부의 소비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만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낭패를 본 경향이 있다. 김정은이 작년 내내 도발을 자제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북한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도발 자체를 자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북한은 지난 2년 동안의 인내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을 지난 1월,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했다. 대표적인 특징은 '5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경제 규모를 상당히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북한이 보여주었던 장마당 시장 활성화, 국영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같은 유사경제개방조치를 다 없애고 계획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단 북한이 전반적인 측면에서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의 대중, 시장친화적 정책을 버리고 아버지 김정은 시기의 조금 더 폐쇄적인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던 부분은 북한의 김정은 우상화 정책이다. 사실 김정은은 지난 10년 동안 우상화 정책을 배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20, 2021년 들어 김정은은 아버지 시절의 우상화 정책으로 복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우상화 소설이 출간되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김일성, 김정일 시절 두 번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북한이 향후 내부 전략을 수립해 가는 데 있어 3가지의 중요한 기둥을 준비하는 것 같다. 첫 번째는 '계획경제로의 회귀', 두 번째는 '우상화 정책',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핵개발의 가속화'를 전략적 툴로서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북한의 전략적 시도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계획경제로의 회귀'로 북한이 지향하는 것은 가장 취약한

경제 부분을 계획경제를 통해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경제 성장을 포기함으로써 내부적 수요만 만족시키는 최소한의(minimalistic)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상화 정책'은 북한 주민들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김정은은 대규모 숙청이 아닌 주로 엘리트에 집중한 숙청을 진행했는데 이 대규모 숙청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공포정치를 대중화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내부단속을 극대화해 내부에 있는 반발의 움직임을 없애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핵개발의 가속화'는, 김정은 자신의 이미지를 핵개발과 아주 강하게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우상화에 있어 핵무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정통성 때문에 핵무기를 더이상 포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미국의 외교적 측면에서도 큰 함의를 가질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북 외교전략에 있어 트럼프의 빅딜과 달리, 단계적인 협상을 선호하며, 심지어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를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북한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향후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 훨씬 더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중국이다. 사실상 중국이 앞으로 북한에 있어 중요해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국제 사회가 북한에 취했던 강력한 경제 압박을 통한 비핵화 구도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요소들을 보고 있으면 향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

## 세션 2.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일관계

사회	(韓)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발표	(韓)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日) 오바 미에 (가나가와대) (韓)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日) 이토 아세이 (동경대)

차두현 (사회):

세션 1이 주로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했다면, 세션 2에서는 세션 1에서 논의된 “전반적인 불안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국적 협력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특히 “다국적 협력의 틀 속에서 한일이 협력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네 분의 발표자가 있다. 순서는 우리 연구원의 이재현 박사님이 먼저 발표하시고, 가나가와대의 오바 미에 교수님, 그 다음이 우리 연구원의 최은미 박사님, 마지막으로 동경대 이토 아세이 교수님이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하겠다. 먼저 이재현 박사님께서 아세안 경험으로 본 동북아에서의 안보협력 경험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표 1. “Troubles of Northeast Asian Cooperation and the Experience of ASEAN”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 발표는 특별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것보다는 역사적 경험, 아세안의 경험, 동북아 3국 사이의 협력 경험과 비교해서 볼 때, 동북아에서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진단이다. 다른 분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안보협력문제까지 다루고 있지는 않다.

아시다시피 동북아를 보면, 한중일 3국 간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개별국가에 의해서 low hanging fruit(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부터 협력을 시작하자고 해서, 원자력, 환경, 보건 등과 같은 분야부터 협력을 하자는 신호가

있었다. 그러나 COVID-19 상황에서도 3국 간의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 현황이다. 여기에 최근의 신냉전이라고 하는 미중 경쟁까지 겹쳐 동북아가 크게 두 개의 블록으로 나뉘지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일 3국 간 협력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아세안의 경험을 놓고 비추어보면,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1960년대 아세안을 만들면서 지역협력을 시작했는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한중일 3국의 협력이 안되는, 즉 갈등이 있는 상황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협력을 시작했고, 그 협력이 50년 넘게 진행이 되어 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협력의 결과도 얻어냈다. 물론 동남아 국가들의 협력이라는 것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협력을 유지해 왔다는 측면에서는 동북아의 협력보다는 나은 상황으로 보인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아세안의 특수한 질서에서 답을 찾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세안과 동북아 국가들의 차이점을 “과연 우리는 지역 협력을 위한 충분한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데에서 찾아보고 싶다. 1960년대 초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정치적 불안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 성장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필리핀, 말레이시아-태국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거기에 내부적으로는 공산주의 문제가 있었고, 더 크게는 외부 강대국으로부터의 간섭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런 우려들이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공유되었고, 공통의 위기의식이 만들어져 개별 국가들 사이의 차이와 갈등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을 한 자리에 모여 앉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저의 진단이다. 그리고 그 동력이 아세안을 지금까지 50년 이상 끌고 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동북아 상황으로 돌아오면, 지금 동북아 국가들의 상황에서 과연 한중일 3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 미래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동북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만 극복할 수 있는, 예를 들면, COVID-19과 같은, 그러한 위기에 대해 공동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협력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유럽에서 만들어진 민족국가라는 개념을 동북아에 대입하면, 동북아 국가들은 유럽에 비해 상당히 젊은 국민국가들이다.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유럽식 개념(European concept)의 국민국가 정의에 따르면, 100년 전후의 새로운 국민국가, 여전히 아주 fresh하고, 강한 민족주의, 국가이익, 국가주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런 국가들 사이에서 위기의식도 공유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미래에 우리가 공통으로 마주할 위기에 대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은 요원할 것이다. 이 정도에서 마치고, 토론에서 이어가겠다. 감사합니다.

차두현 (사회):

다음으로는 오바 미에 교수님께서 아시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한일 간 협력 분야와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다.

## **발표 2. “The Potential of Japan-Korea Cooperation in Asian Multilateral Fora”**

오바 미에 (가나가와대 교수):

일본과 한국의 협력을 다자간 협력 속에서 그 가능성을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한일관계는 어려운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협력이 좀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지정학적인 부분, 정치체제적인 면에서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다자간 협력 속에서 한일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는 우선, 아세안이 중심이 되면서 구축되었던 지역아키텍처(Regional Architecture)에 일본과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이어져왔다. ASEAN+3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한중일의 협력이 진전되어 왔다.

앞서 한중일 3국관계 가능성은 한정적이며, 협력이 진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 있었으나, 이만큼 정치적인 관계가 불안정한 동북아에서 3국협력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다. 문화협력 또는 문화교류와 같은 것들이 두드러져 있으나, 기능적 협력도 이루어져 왔다. 특히, 환경협력은 일찍부터 이어져 왔다. 정치적인 관계, 불안정성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한중일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를 제공해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서울에 있는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이 2011년에

설립되었고, 올해 3월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한중일 3국협력과 함께, 앞서 언급되었던 한미일 방위협력, 이것도 그렇게 진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이 3국이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 또한 방위협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다. 한중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은 다루고 있는 분야가 다르지만, 다자간 협력 속에서 제3국을 끼는 형태로 일본과 한국이 관계를 가져왔다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ASEAN이 중심이 된 지역아키텍처 속 일본과 한국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앞서 한중일 3국 간 협력,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후자는 진전되어 있지 않으나, 그러한 지향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0년을 보면,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방향성의 차이가 안타깝게도 현저한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 배경으로, 미중 관계와 중국에 어떤 식으로 관여할 것인지에 관해, 일본과 한국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2010년대에 새로 출범된 CPTPP라든지, Quad라든지, FOIP(Free and Open Indo-Pacific)과 같은 것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차이가 난 것 같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입장인데, 한국은 거의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게 됐다. 그래서 다자간 프레임 속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커졌다는 것이 지난 10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는 앞으로 시정해야 하는 부분이고, 일치된 부분으로는 작년에 서명된 RCEP이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방향성을 생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과 일본이 제대로 대화하여, 검토해 보면 어떤 식의 지역질서가 양국에 바람직한지에 대해 상당히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 모두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체제를 바라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인권에 대해 개방된 세계를 바라고 있고, 이 지역 그리고 세계가 전략적으로 안정적이고 평화롭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한중일 3국 간 협력은 한일 정상이 중국 정상을 포함시켜 함께 만날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고, 상당히 긴 여정이기는 하겠지만, 기능적 협력을 계속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CPTPP에 한국이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중국의 CPTPP 참여, 그 전망이 있다면 한국이

CPTPP에 참여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국이 서면으로 CPTPP에 가입을 하는 기회를 모색하고, 일본과 함께 같은 경제 룰을 공유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한중일 안보협력이다. 전체적으로 일본도 한국도 결국 양자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FTA 동향으로 보아 양자간에서는 어렵다. 다른 나라를 낀 형태로, 다자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쪽에 한미일만의 협력만 강조하게 되면, 중국을 배제하게 된다. 그래서 중국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일본, 중국, 한국의 3자 간 협력이 중요하고, 상황이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듀얼 트랙으로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공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상으로 마치겠다. 감사합니다.

차두현 (사회):

다음 부분은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 단순히 경제나 안보에 그치지 않고 보다 포괄적으로, 이것 자체도 아마 안보적인 이익에, 신안보 이익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과 한국이 공유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민주적 체제와 가치일 것이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미얀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도전 받고 약해지고 있는데, 지역 내 민주주의 질서를 위해서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의 최은미 박사께서 발표해주시겠다.

### **발표 3. “Rethinking Strategic Importance of Korea-Japan Cooperation to Strengthen Regional Democracy Order”**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저는 지역 민주주의 질서 강화를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 재고라는 주제로 발표하고자 한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일반 국민 레벨에서도, 정부 레벨에서도 약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함께 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고, 따라서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이유, 목표, 필요성,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지난 55년 동안 한일 간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대립을 겪어 왔고, 최근에는 2018-2019년을 기점으로 악화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양국 국민과 정부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다음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1978년 이후에 일본 내각부의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먼저 주변국에 대한 일본의 친근감의 정도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미국(파란색)에 대해 꾸준한 친근감을, 러시아(오렌지색)에 대해서는 꾸준한 거리감을 느껴왔다. 여기 중국(회색)에 대해서는 8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친근감이 하락하고, 그 이후에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에 대한 감정은 좀 복잡해 보인다. 증가한 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일본과 주변국의 현재 관계에 대한 평가이다. 친근감과 마찬가지로, 미국과는 우호적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비우호적 관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한국에 대해서는 친근감과 마찬가지로 복잡해 보인다.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하락하였지만, 그전까지는 50%를 넘길 정도로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다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향후 관계 발전의 중요성이다. 슬라이드에서 보듯, 한국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부터 중요성이 하락하는 것이 관찰된다. 이러한 경향은 함께 조사되었던 인도(하늘색)가 그 중요성이 상승하는 것에 비해 놀라운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번에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 슬라이드는 한국이 주변국에 대해 가깝게 느끼는 정도이다. 한국 또한 일본처럼 미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해 북한보다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일본분들께서는 한국 사람들이 북한보다 일본에 거리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놀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다음 슬라이드는 한국이 느끼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국가이다. 북한, 중국, 다음으로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즉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 관찰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 주로 경쟁상대 혹은 견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국 국민들의 인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한일 양국의 국민감정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변동의 폭이 매우 커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변동의 폭이 크다는 것은 가변적이라는 것이고, 결국 그만큼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가 보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향후 관계이다. 특히 일본의 한국과의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 즉 한국과 협력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친근감은 높지만, 관계발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국 감정적인 친근감과 이성적 혹은 논리적인 관계의 중요성이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향후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과거 한미일이 반공연대, 이데올로기, 북한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이 있어 함께 협력할 수 있었다면, 향후에는 어떤 이유로 함께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슬라이드는 오늘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던 일본의 지역구상인 FOIP에 대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도 한국의 존재는 매우 미미하다. 다음 그림은 한국의 지역구상에 대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도 일본의 존재감은 매우 미미하다. 결과적으로 최근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Quad, Quad Plus, CPTPP에 한국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일본이 정말 한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일본은 한국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야기들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한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한일 관계의 미래는 매우 암울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가야 할 운명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제목에서 제시한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최근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함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굉장히 많다.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COVID-19와 같은 초국경적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할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도 협력의 이점들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플러스 알파(+α)의 협력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당위적인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차두현 (사회):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한일 간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중국이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한일 양국이 아픈 경험을 겪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해양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중단이 몇 년 전에 있었고 한국의 경우에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DD) 도입과 관련해, 중국은 부인하지만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와 관련해 일본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할 것인데, 이와 관련해 이토 아세이 동경대 교수님께서 일본의 경제적인 실용주의, 다시 말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경쟁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다.

#### **발표 4. “Japan’s Economic Pragmatism: Cooperating and Competing with China”**

이토 아세이 (동경대 교수):

중국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관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제시된 그림은 한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의 대외교역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제2차대전 전에는 북미와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했으나 제2차대전 이후 조성된 냉전구조 속에서 대미무역이 압도적으로 늘었는데 이는 일본이 대미무역을 축으로 국가재건에 나섰다기 때문이다. 중국은 90년대 이후 개방정책을 펼치면서 일본의 교역국이 되었다. 2000년대부터는 고이즈미 정부 이후 일중 간에 역사인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2010년을 전후해서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 무역 비율은 일관되게 증가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 영향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더 크게 늘었고, 종전 이후 최대 규모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일본은 리스크 헷징(risk hedging)와 관여와 협력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마련하였다. 2기 아베 정부가 이를 동시에 수행하였는데, 이를 두고 CSIS의 Goodman은 일본의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중국에 관여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헷징을 하며, 이와 동시에 국제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추구한다고 정리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양자적 접근(dual approach)라는 것은 심각한 미중 경쟁 시대에서 어디까지 실천가능한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문제와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대외전략은 보시는 표처럼 정리가 가능하다. 비록 앞서 오바 미에 교수께서 지적하였듯이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일본은 대중 리스크를 헷징하기 위해서 EU 및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안보와 관련해서는 안보협력기제를 설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자민당은 작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2022년까지 정기국회에서 '경제안보일괄추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는 것이다.

대중 관여/협력 측면에서는 RCEP이 중요한 채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애초 2020년 4월 방일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연기되었는데, 이를 두고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언론에 해당 방일이 이루어졌다면 일중 간 제5의 정치문서가 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였다. 일례로 2017년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여 그중 일부는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여 태평양 영해에 낙하하기도 하였는데, 같은 해 5월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은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가하여 시진핑 주석에게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친서에 북한 문제도 다뤘던 것으로 보아 북한 문제도 일본의 대중 관여/협력의 틀로 봐야 할 것이다.

FOIP의 개념도 중요하나 아직까지 그 내용은 불투명하다. 아세안, 인도 등이 이를 공식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후일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의 외교정책이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FOIP은 중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용도도 아니고 배제를 하기 위한 용도도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경제 부분을 더 말씀드리면 디커플링(decoupling)은 동아시아에서 불가능하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역내 무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냉전 종식 이후 역내 무역과 네트워크가 발전된 현 시점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대중 10대 수출품목을 보면 반도체, 제조장비가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중 주요 수출품목에도 반도체, 메모리, 직접회로 등이 있다. 이러한 고도기술제품 수출이 향후 3국 간의 무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례로 일본과 EU는 중국의 2020년 발효한 수출관리법에 대해서 의견서 서한을 발송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일본과 한국도 이같이 공통된 대중 수출품목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일본 국내에서 디커플링에 대한 시각에 대해 말씀드린다. 2020년 최근 경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만일 미국정부가 일본 정부에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 실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 일본이 중국과의 기술 및 인재 흐름을 차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0.7%가 ‘매우 강하게 찬성한다’, 20.9%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대다수는 ‘쉽게 선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 설문조사로 볼 때 디커플링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아마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디커플링은 어려운 선택의 문제다.

그렇다면 한일이 공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반도체 수출 등 기술 제품의 수출에 있어서 경제적인 예견가능성 확보를 모색해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쌍순환경제전략’(dual circulation)과 관련하여 한국도 중국에 대규모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중국의 정책에 대해 한일이 대응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한일 모두가 RCEP 가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CPTPP를 어떻게 접근할 지, 일본이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차두현 (사회):

이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이 종료까지 5분 못되게 남아서 아쉽지만 두 분 정도 질문을 받고, 질의 시간 이후에는 채팅창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따로 질문이 없으시거나 나중에라도 생각나시면 이제부터는 채팅창을 활용해서 질의 바랍니다. 그러면 폐회준비를 위해서 세션 2를 마치도록 하겠다.

## 폐회

---

키쿠치 요나 (전체사회):

그럼 이상으로 세션을 종료하고 Wrap-up 세션을 갖겠다. 한승주 이사장님부터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아주 좋은 토론을 했다. 발표도 잘해 주셨고, 좋은 질의도 해 주셨고, 적절하고 중요한 이슈를 식별했다. 간략히 향후 계속 논의하고 해답을 찾아야 할 문제들을 말씀드리겠다. 제가 개회사에서 한국 내 무작정적인 반일 감정에 대한 반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변화가 아직까지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생각, 태도에 관한 조사에는 반영이 안된 것 같다

그러나 내주 있을 서울 및 부산 시장선거,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일본 문제가 과거처럼 그렇게 반일이슈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일 간의 이슈들. 위안부문제, 소녀상문제 이런 것들을 사적인 이해관계나 금전적 이해관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한일관계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한일관계에 지장을 주었다면, 앞으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으로, 쿼드에 관한 이슈이다. 제가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저항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에서 유럽의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비슷한 기구 또는 조직이 결성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극히 반대하고 있다. 독일이 통일될 때 중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통일된 독일이, 즉 과거 동독이 NATO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였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이 통일되는 경우에 이 지역에 NATO와 같은 다자동맹이 어떻게 결성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쿼드가 대화체(dialogue)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러한 모습이 중국에게는 상당히 자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은 쿼드의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거기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얼마나 깊이 참여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 특히 지정학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이 쿼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세션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이 지역에는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다자기구가 없다. 그러니까 NATO 같은 군사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기구 또는 프로세스가 아닌, 유럽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럽 안보 협력 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같은 기구가 부재하다. 아시아에서 집단안보 개념, 러시아가 과거에 얘기한 것이지만, 아세안이 이끌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라든지, 또는 NGO로서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CSCAP)이라는 기구가 있긴 있지만,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의 안보 메커니즘이 부재하다. 따라서 쿼드는 그 자체로서 명분이나 필요성이 있으며, 여기에 적극 참여하는 국가들이 존재하며, 앞으로도 그런 국가들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인 연성안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COVID-19,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미얀마의 로힝야(Rohingya) 문제, 또는 항행의 자유, 대량살상무기, 핵확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급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인 기구가 있다면, 모든 관심이 쿼드에 집중되고 또 중국의 반발을 더 일으키게 되는 상황을 희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OSCE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 중에 한 부서가 Roma and Sinti라는 부서가 있었다. Roma and Sinti는 유럽 지역에 15만명으로 추정되는 집시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유럽에서는 연성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커다란 기구인 OSCE에서 다루고 있다. OSCE는 과거 소련도 가입을 했던 기구이다. 지금은 물론 러시아가 회원국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을 희석시키는 데에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즉 Quad와 Non-Quad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안보 문제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기구의 창설은 간접적으로도 한일관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제의를 폐회사로 대신하겠다.

가와시마 신 (도쿄대 교수):

시간이 지나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제1세션과 제2세션에서, 논의의 톤에서 차이가 있었다. 군사안보 면에서 생각하면, 미중은 심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일본과 한국에서 선이 그어졌다. 미일한이 거기에서 멈추게 될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대로 동남아를 보더라도, 필리핀, 베트남 등과 공동으로 할 것인지, 미국, 호주, 일본, 인도와의 협력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미중 대립의 구도가 두드러졌다는 것이 제1세션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대중포위망이라는 것이다. 쿼드가 NATO가 된다고 하는데, NATO가 되려면 일본은 헌법을 개정해야 해서 어렵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보고 있다.

제2세션은 경제, 지역협력의 관계에서 보면 디커플링(decoupling)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뤘다. 물론 첨단산업 등 특정 부분에서는 가능한데, 사람, 자금의 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쉽게 디커플링을 할 수 없다.

제1세션과 제2세션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제와 군사안보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중국 정부가 말하는 경제와 안보, 어떻게 하면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자산동결과 관련된 법률의 적용 문제로, 미국과 중국의 잇따른 법률의 역외적용이 있다. 앞으로 여러 나라가 이에 동참하게 되면 개인의 자산 동결이 외부에서 일어나, 자본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적 이동과 자금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된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은 이에 주의해야 한다. 경제는 이렇고, 군사안보는 이렇다는 정경분리의 원칙으로도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과 한국 양측의 직접적인 대화가 중요하다. 정의(justice), 사실(fact),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포함해서, 서로가 객관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본이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계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서를 둘러싼 문제가 국제관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 정서, 감정이 개입하게 되면 냉전이 아닌 열전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중 대립으로 인해 여러 지역에 마그마처럼 고여있는 정서, 억압되었던 감정이 분출되면 여러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일본과 한국에서 역사문제를 포함해서,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관리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와타나베 마유 (일본국제포럼 이사장):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중대립, 그리고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흥미로운 발제를 해주셨다. 이와 같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아산정책연구원의 한승주 이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포럼이 온전한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적 공헌을 계속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아산정책연구원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끝/

※ 본 스크립트는 한일 동시통역 내용에 기준하여, 한국어 버전으로 작성되었습니다.